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공조본,尹 체포영장 청구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경 사전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한남동) 관할지를 고려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약과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걸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왼쪽)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이 30일 도청 대공연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분향소 찾은 김 지사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참사 현장 찾아 전북지역 유가족과 면담도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3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후 참사 현장을 찾아 전북지역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이들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먼저 무안종합스포츠타파크에 마련된 무안 합동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유가족과 직접 만났다. 면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는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도지사로서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과의 면담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며,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유가족이 안정적인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참사 당일인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전북특별자치도 대책반을 구성하고, 전북 연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유가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동 1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애도 기간인 오는 2025년 1월 4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행안부 '2024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

전북, 5개 분야 '3등급' 이상

3개 분야 '1~2등급' · 2개 분야 '3등급' 받아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5개 분야에서 3등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안전지수는 6개 분야 중 3개에서 우수 등급(1~2등급)을 받아, 전국 9개 광역도 중 두 번째로 고른 지수 등급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사고, 감염병 등 2개 분야는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하였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3개 분야는 1단계 하락했다.

또한, 도내 시군의 경우 군산시가 2년 연속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진안군은 범죄 등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다만, 화재 분야의 경우 2023년 화재 사망자수가 14명으로 증가(2022년 11명, 전년대비 27% 증가)하여 4등급을 내다냈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안전지수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3월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지수 개선 컨설팅 및 시설개선사업 등 2개 중앙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했고, 위해요소 저감사업 발굴·추진, 유관기관 및 시군 실무 TF 회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청 실무교육 등 지역안전 지수 향상과 실무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힘써 왔다.

도는 앞으로 화재 분야 등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지수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종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군,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켜 전(全)도민이 더욱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여객기 참사로 도내 지자체들

예정된 신년행사 취소 잇따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국가예대기간이 내년 1월4일까지 지정된 가운데 전북 곳곳에서 예정됐던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

30일 전북 14개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31일로 예정된 제야 행사를 취소했다. 익산시도 당초 예정됐던 종무식과 시무식, 해남이, 해동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

장수군은 내년 1월 1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2025년 을사년 신년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한 상태다.

부안군도 31일 예정돼 있던 '2024 번산 해남이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군청사 조기 개양과 함께 국가예대기간에 계획된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모든 시군은 당초 예정된 종무식과 시무식, 해남이, 해동이, 신년맞이 행사 등 취소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김재훈 기자

을사년 새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독자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1월 2일 신년호 발행합니다.

도, 전남에 장례비 등 긴급지원

소방·경찰도 현장 급파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지난 29일 발생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기관들이 유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익산 등에서 담당 공무원 10여명이 무안공항에 파견돼 유족들의 심신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전남에 긴급 지원금 3,000만원과 사망자 1명당 장례비 1,500만원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도 사고수습을 위해 이날 구급차량 14대와 소방력 37명을 무안 현장에 파견했다. 전남에는 구급차 15대와 헬기 1대, 47명의 소방력이 투입됐다.

전북경찰청도 신원확인하고 질서를 위

한 경력을 투입했다.

현재 경찰관기동대 54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 파견됐고, 신원확인을 위한 신원확인요원 19명을 현장에 급파한 상태다. 전남에는 약 30명의 신원확인요원이 투입됐다. /김재훈 기자

희생자·유가족분들께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이맛이 청정라거다!
리얼탄산100% 청정맥아100%

청정라거-테라
TERRA
FROM AGM